

수도요금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 2021 광주·전남 상수도 주요지표

구분	1인1일 급수량(L)	평균단가 (원/㎡)	생산원가 (원/㎡)
전국 평균	352.9	720.77	989.2
광주시	337.1	644.11	740
목포시	381.3	694.92	943
여주시	452.2	1,011.84	1,369
순천시	329.7	872.61	1,000
나주시	397.3	804.18	1,653
광양시	366.5	914.58	1,188
담양군	365.5	701.48	1,960
곡성군	393.5	515.71	1,299
구례군	459.8	1,085.28	1,837
고흥군	388.5	1,133.91	1,595
보성군	418.1	804.08	1,125
화순군	445.5	931.28	2,796
장흥군	371.1	880.99	1,800
강진군	357.8	878.26	1,106
해남군	384.2	895.66	1,125
영암군	780.8	1,048.58	2,213
무안군	380.0	712.62	1,262
함평군	416.0	579.63	1,623
영광군	391.1	839.9	2,349
장성군	390.5	808.4	1,380
완도군	351.2	867.46	1,317
진도군	413.4	530.83	1,800
신안군	399.9	847.76	2,487

남도지역에 유례 없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수도요금 편차가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같은 상수원의 물을 사용함에도 수도요금에 지자체 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생산원가에 비례하지 않고 단순히 지자체별 조례나 요금 정책에 따라 수도요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크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 광주·전남에서 수도요금의 평균단가(㎡당)가 가장 비싼 지역은 1133.91원으로 고흥군이다.

가장 싼 곳은 곡성군(515.71원)으로 수도요금은 최대 2.1배 차이가 났다. 광주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644.11원으로 생산원가 740원과 비교하면 요금 현실화율(원가대비 사용료 비율)은 87.1%에 달했다.

전남지역 수도요금은 지자체별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지자체는 광역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북댐에서 공급된 물의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일부 지자체 중 지방상수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물을 사용하면 부담이 적어진다.

여기에 상수원 개발의 용이성, 광역상수원과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및 지형적 요건, 정수처리 비용, 지역의 재정상태,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및 개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취수원 유무 따라 편차 커
곡성 ㎡당 단가 516원으로 최저
전남 최고 고흥 1134원과 2배 차
누수율도 영향...관리 소홀 지적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천차만차다. 가장 높은 곳은 순천시로 87.3%(평균단가 872.61원, 생산원가 1000원)에 달했고, 가장 낮은 진도군은 29.5%(평균단가 530.83원, 생산원가 1800원)에 그쳤다.

지역 인구도 영향을 미친다. 급수인구에 비해 급수구역이 넓은 곳일수록 생산원가의 현실화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모든 시·군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결국 지자체는 지방세나 부채로 차액을 충당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를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수도요금은 지자체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수도요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흥군 과역면에서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져서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청소할 때나 쓰던 지하수를 수집검사를 받아가면서까지 꺼내 쓰기 시작했다"며 "가게 수입은 그대로인데 공과금은 갈수록 늘어나니, 가게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지자체 차원에서 업소용 수도 가격만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수도요금 평균 단가가 높게 나타난 지자체는 낮은 유수율과 높은 누수율을 보이기도 해 전반적인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결국 노후 된 관로가 많아 누수가 많이 되는 곳에서 수도요금이 높다는 것이다.

유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지자체는 영암군(50%)이었으며 구례군(54.7%)과 보성군(61.7%), 여주시(63.6%), 화순군(64.1%) 등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물이 새어나가는 비율을 의미하는 '누수율'이 높았던 곳은 영암군(47.5%), 구례군(43.9%), 고흥군(37.1%), 보성군(37.1%) 순이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수도요금이 높은 것은 수도관의 노후화에 따른 높은 누수율과 낮은 유수율과 연관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노후 수도관을 현대화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조합장 선거 끝났지만 3개월 동안 집중 수사 광주·전남경찰청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은 광주지역 조합장 당선인 3명을 수사선상에 두고 당선자와 낙마자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출마자 본인과 선거운동원 등 주요 피의자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사전구속영장을 준비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당선자 중 몇 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는지 여부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투표가 끝난 9일부터 3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투표 전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80건 115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투표가 끝나기 전에는 피선거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출마자와 선거운동원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사범도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빠른 수사를 통해 집중수사기간 내 마무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낙마한 광주 지역 조합장 후보자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고야 소송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가 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한국 정부의 해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 온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정부안 비판

나고야 소송지원회 "공동 투쟁"... 시민모임 11일 서명운동 돌입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보다 일본이 내민 당근을 던져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더 화가 납니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광주를 찾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하는 안을 낸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나고야 소송지원회)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는 9일 광주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강하게 비

판하며 이후 일본에서도 꾸준한 공동 투쟁을 벌이기로 약속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가해자는 일본과 미쓰비시·일본제철이지만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한국 정부도 피해자들을 욕보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해를 일컫는 것"이라고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배상안에 대한 코멘트조차 거부하며 '한국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입장을 내놨다"며

서 "이는 작은 책임조차 지지 않고 도망가려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 정부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싶어 일본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태도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고야 소송지원회는 오는 14일 도쿄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외무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이후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역사적 진실 알리기'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1일 오후 4시 30분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부상자회 등 공동선언은 5·18민주화운동 부정"

광주 국회의원 9명 성명 "특전사동지회 진실 밝히는데 협조해야"

9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9명이 성명서를 통해 "용서와 화해" 대국민 공동선언은 5·18민주화운동의 부정이자 역사 왜곡이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국회의원들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민형배·양항자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부상자회, 공묘자회 등 일부 공법단체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가해자들과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을 추진해 오월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과 용서, 화해는 불의한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민을 비롯해 국민적 공감이나 합의없이 과도한 당사자주의를 앞세워 5·18민주화운동을 자신들의 전유물

처럼 사유화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이나 감형, 특별사면과 복권을 권의할 수 있다"며 "특전사동지회가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바란다면 80년 5월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질서회복 임무' '노고와 희생'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는 있을 수 없다"며 "광주시민과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정보호 사고 원인은 '갑판 통해 유입된 바닷물'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로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를 낸 '정보호' 사고 원인이 '갑판을 통해 유입된 바닷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정보호 전복사고 합동조사팀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합동갑판을 거쳐 정보호 전복 사고 원인으로 갑판을 통해 유입된 바닷물을 지목했다.

조업 중이던 정보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약 3시간 가량 운항했는데, 기운 방향으로 바닷물이 들이치면서 갑판을 넘어 바닷물이 유입됐다

는 것이다. 갑판과 선체 연결부에 외부 유입물을 막는 '턱'이 없어 바닷물이 들어차는 걸 막지 못했다

는 분석이다. 선체 내로 들어찬 바닷물을 빼내지 못하면서 기관실에 약 40cm 정도 물이 찬 이후 배가 갑자기 뒤집혔다고 수사당국은 분석했다.

한편 선주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선박 전복죄, 어선법(불법 증·개축 위반) 위반 등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댐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

- ① 세컨하우스
- ② 소형 주택
-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 ④ 주말 하우스 최고
-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상가매매 (상무지구)

-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 시세 - 10억
- ▶ 급매 - 7억 (용4억)

(보3천, 월수익 380만)

010-2614-9801

010-6670-9800